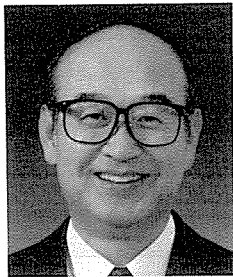


획 III 안전문화의 경제학

특

집

안전담보로 국가경제 일으킬 순 없다 산업재해 근로손실, 노사분규의 33배



朴 乃 會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산업안전이 작업의 질과 직결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국가경제를 일으킨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가면서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차 저하되어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산업안전문화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모든 산업체의 구성원들이 산업안전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행동양식, 신념, 태도 그리고 사고방식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문

제가 무엇이고 최우선의 관심사업을 스스로 다짐하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집결된 것으로 안전성에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안전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직원들의 작업생활의 질(QWL)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93년도의 경우 92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5.38%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1.65%가 감소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5.96%가 감소하였고 재해율도 0.22%가 감소되어 198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의 경

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표1) <표2> 참조).

특히 94년도 노사분규 참가근로자 기준 근로손실 일수 1백52만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그 33배인 4천6백83만4천5백여일로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93년도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8백72억원보다 산재로 인한 총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그 2.1배인 4조3천억원임은 안전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국가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이 경쟁국가인 싱가포르의 62배, 대만의 24배, 일본의 9.7배, 프랑스의 3배로서 이들 경쟁국가들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현황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이 감소한 반면에 기타 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전체 재해의 45.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이 따르고 있다(표3참조).

대형화 되어가는 안전사고

하지만 최근 들어 잇달은 안전사고들 즉, 항공기 사고, 선박사고, 건설 현장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은 대형안전사고들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표1〉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간접 손실액

연도	적용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경제적 손실추정액(단위 : 백만원)			근로손실일수
			계	사망	부상	신체장애자	직업병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92년	154, 820	7, 058, 704	107, 435	2, 429	103, 678	33, 569	1, 328	1.52	4, 657, 820	931, 564	3, 726, 256	50, 574, 148
93년	163, 152	6, 942, 527	90, 288	2, 210	86, 665	29, 932	1, 413	1.30	4, 362, 655	872, 531	3, 490, 124	46, 834, 563
증감 (%)	8, 332 (5.38)	△116, 177 (△1.65)	△17, 147 (△15.96)	△219 (△9.02)	△17, 013 (△16.41)	△3, 637 (△10.83)	85 (6.40)	△0.22 (△14.47)	△295, 165 (△6.34)	△59, 033 (△6.34)	△236, 132 (△6.34)	△3, 739, 585 (△7.39)

자료 : '93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p7

잇달은 대형사고들의 원인이 사소한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됨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과 정착은 시급하다.

안전문화의 구성차원은 행동패턴, 규율, 방침, 서류, 문서 등과 같은 가시적 수준(Visible)에서 가치관을 포함하는 인식적 수준(Awareness)을 거쳐 환경과의 관계, 인간본성,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잠재적 수준(Invisible Preconscious)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안전행동이 유발되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의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우리사회 전체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터스(Peters)와 워터맨(Water-man)이 제시한 조직문화의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안전문화의 개발 방안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표4〉 참조).

첫째, 공유가치 측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가치관,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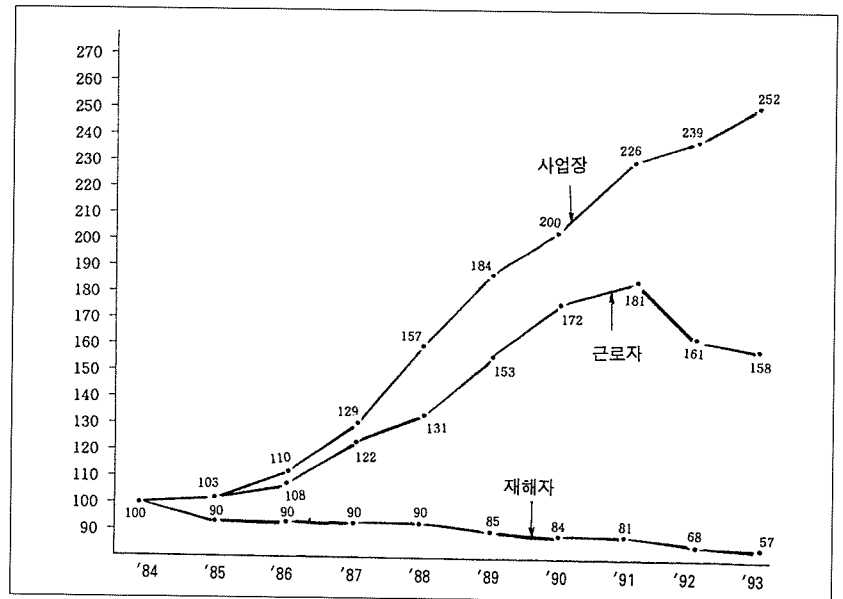
기본목표 등이다. 이 부분은 기업전략의 목적과 종업원 행동양식 등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안전문화 형성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둘째, 전략측면은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계획과 자원의 배분패턴을 포함하는 부분으로서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유도, 재해발생 취약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개선 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다.

셋째, 구조측면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권한관계, 안전업무의 방침규정, 행정절차, 책임규정 등과 같은 것으로서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의 유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넷째, 시스템 측면은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상벌보상제도, 감사제도 등을 포함하는 부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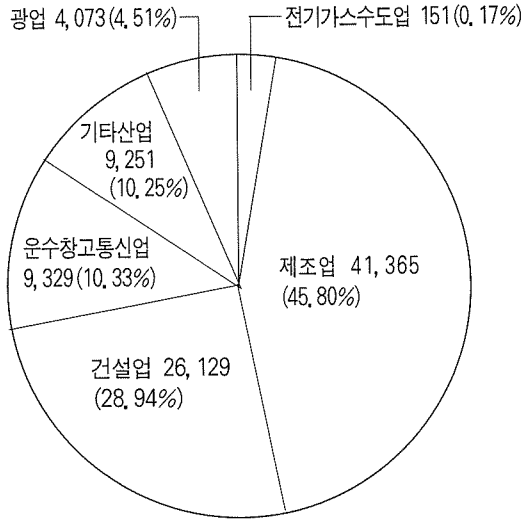
〈표2〉 연도별 재해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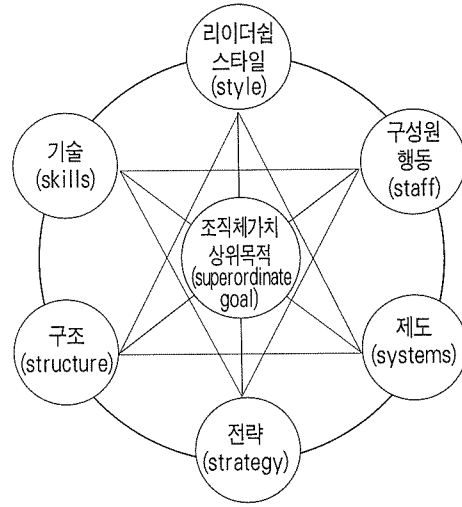
자료 : '93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p9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사업장수	64, 704 (100)	66, 803 (103)	70, 865 (110)	83, 536 (129)	101, 445 (157)	118, 894 (184)	129, 687 (200)	146, 284 (226)	154, 830 (239)	163, 152 (252)
근로자수	4, 384, 589 (100)	4, 495, 185 (103)	4, 749, 342 (108)	5, 358, 546 (122)	5, 743, 970 (131)	6, 687, 821 (153)	7, 542, 752 (172)	7, 922, 704 (181)	7, 058, 704 (161)	8, 942, 527 (158)
재해자수	157, 800 (100)	141, 809 (90)	142, 088 (90)	142, 596 (90)	142, 329 (90)	134, 127 (85)	132, 893 (84)	128, 169 (81)	107, 435 (68)	90, 288 (57)

〈표3〉 산업별 재해의 업종별 분포



〈표4〉 산업안전문화의 구성요소



로서 산업안전문화 개선의 중요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 구성원 측면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요소로서 인력의 구성과 능력, 전문성, 가치관, 신념, 욕구와 동기, 그리고 태도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노사 및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 부분의 개발을 행할 수 있다.

여섯째, 리더쉽 스타일 측면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경향과 행동패턴, 윗사람들의 행동스타일, 구성원간의 상호관계, 집단간 관계의 개방성,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등과 같은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방법과 개방적인 태도로서 종업원들을 대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곱째, 기술측면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체 운영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술, 지식, 능력수준, 기법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해

서는 매스컴, 학교·가정생활, 사회여론,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를 통한 안전문화의 발표와 수범사례의 발굴, 시상, 우수사업장들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다.

안전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정부, 기업, 정부투자기관, 각종 학교, 연구소, 각종 단체에 이르는 각계의 체계적인 활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야만 한다. 각 당사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안전문화 정책 제시해야

첫째, 정부는 각 부처별로 부처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문화 정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확실히 하고 인적, 재정적, 제도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재정적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자본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기술을 지도함으로써 사망 등 중대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책으로 발간, 유사업종에 배포하는 등의 행동이 요구된다.

둘째, 언론은 인간존중개념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를 위한 캠페인, 단막극, 광고, 자막 등을 통하여 안전의 중요성, 안전지식 등을 보급하고 안전문화 운동에 무관심하거나 부진한 계층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자극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등 안전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안전관련단체는 안전문화운동도 안전활동의 일환이므로 안전실천의 주무기관으로서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 계획, 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안전문화의 개념정립, 안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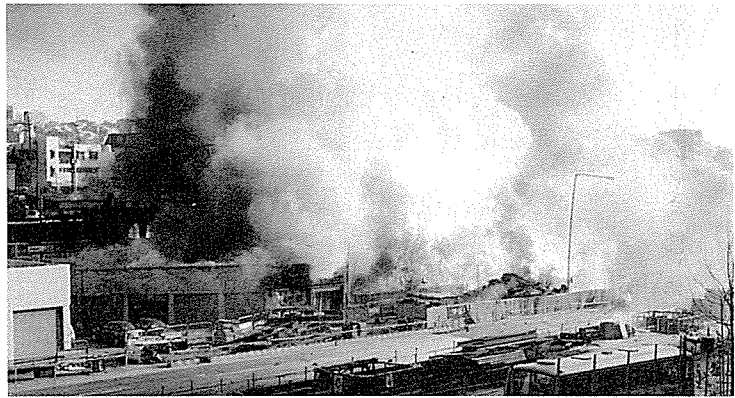
추진체계의 모형화, 안전문화추진의 구체적 전략 및 방법, 안전문화 추진 계획 및 시행, 평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노동부 및 타 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도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안전공단, 안전학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안전협회, 보건협회, 안전관리 대행협회, 소방협회 등에서는 위에 언급된 계획은 물론 안전문화 전개를 위한 내용, 프로그램, 안전문화 접근방법에 관한 책자,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인단체, 한국여성단체총연합회, 종교단체 등과 같은 각종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안전문화를 위한 시간을 필히 할애하여 안전문화의 중요성, 안전지식 등을 보급하고 안전문화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종 기업에서는 전문 산업 안전기술자를 채용하여 산업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안전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비나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산업안전관리 차원을 벗어나서 질서 및 예절지키기, 정리정돈의 생활화, 가정안전운동 등 안전문화 정착차원의 운동을 병행하여 새로운 안전의식 개혁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험한 기계, 기구는 사전검사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직업병을 예방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각종 구조물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시공할때 우리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의 도시가스공급기지 지하저장고가 폭발, 볼길이 30여m 공중으로 높이 치솟는 바람에 일대가 검붉은 화염과 연기로 뒤덮인 안전문화 부재의 현장.



여섯째, 각종 학교들이 맡은 역할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단일 교과서 편성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급 학교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종업원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안전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중 안전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홍보를 학교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글을 통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감소가 그 손실액이나 사고 근로자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가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사고 근로자들의 슬픔과 그들의 인생의 파멸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안전문화의 정착노력이 요구된다. 이들 관련당사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산업안전문화의 정착과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게 될 때 진정한 선진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생각한다. ⑤7